

“한일갈등, 총선에 긍정적”... 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문

국익보다 정파이익 우선... 靑 최측근의 민낯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남남갈등으로 번진 한일갈등

‘외교문제 정쟁이용’ 논란 고조
與 해명에도 野 “여야 협치 부정”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갈등이 최근 남남갈등으로 불거진 모양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한일갈등이 내년 총선 때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고서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외교문제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낳았다.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간 협치가 중요하지만, 민주연구원발 한일갈등 보고서는 여야간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정계로부터 지적을 받은 민주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구원발 한일갈등 보고서 내용은 이렇다.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총선

영향은 (민주당에) 긍정적일 것”이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효과’가 있지만 ‘지지층 확대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풀

이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반발했다. 결국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주의를 줬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일 비공개 회의 때 양 원장에게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역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권 내 수습에도 불구하고, 민주연구원발 한일갈등 보고서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계를 비롯해 여론간 남남갈등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야권과의 협치를 통해 한일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한일갈등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나. 한일갈등으로 또 다른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더욱이 현재 민주연구원 수장으로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이신데 이번 보고서 논란은 문 대통령의 과거 언행과도 사뭇 다르다”라면서 “문 대통령은 이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통해 ‘한일갈등 관련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회계기준 바꾸자 부채비율 켜중 항공·해운사 재무건전성 비상

금감원 15개업종, 100개 기업 분석

올해 리스와 관련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운송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운용리스를 주로 이용하는 15개 업종, 100개 기업의 리스기준 변경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상기업 대부분의 부채비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리스만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고,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용리스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항공기 운용리스 관련 부채 인식으로 항공운송업의 부채비율이 85.8%포인트나 급등했다. 한 항공운송

기업은 부채비율이 238.6%포인트나 높아지기도 했다.

영화관 운영 등으로 건물 리스가 많은 영상·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도 부채비율이 85.5%포인트나 올랐고 ▲해운업 42.8%포인트 ▲육상운송업 33.2%포인트 ▲유통업 32.9%포인트 ▲창고·운송 관련 서비스업 12.2%포인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부채비율은 높아지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기존 영업비용이던 운용리스료가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이차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눠 인식되기 때문이다.

/양상미 기자 smahn1@

“저축銀·대부업, 日 금융보복영향 거의 없어”

日 금융자금 회수 긴급 좌담회

국내 대부업계 日 차입금 3.4% 불과
금융보복 언급이 되레 시장불안 야기

일본 경제보복의 영향으로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에서 “금융업의 속성상 신뢰가 영업의 바탕이 되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있는 2금융권의 전체 여신 76조5468억원 중 일본계 자금이 22.7%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자금은 100% 대체가 가능해 금융보복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외화유동성이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해 여타국 은행의 대체조달 및 대환대출이 어렵지 않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정기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일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건 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에서 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요하지만 벌어지지 않은 일본의 금융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도 일본계 금융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국내 대부업계의 일본 차입금은 3.4%에 불과해 업권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정책적인 규제도 있어 일본이 갑작스럽게 국내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역시 “대출영업에 드는 재원 대부분은 한국 국민들의 예금으로 79개 저축은행 중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보유한 금융사는 없다”며 “일본과의 경제마찰이 저축은행 업계에 끼칠 영향력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또한 일본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부인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정책과장은 “일본이 일본계 저축은행의 납입 자본금을 줄이는 부분을 걱정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통제장치가 있다”며 “일본이 국내 금융사의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자 매각에 대해서도 대주주 변경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 과장은 “일본계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이유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철수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일본의 자금 회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경 기자 hong93@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소득 80만원 줄었다”

한경연 법인세비용 보고서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영향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원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발표한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현재의 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증가 → 투자 감소 → 자본스톡 감소 → 노동의 생산성 감소 → 성장을 둔화’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CEA가 기존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한다’

고 분석한 것을 적용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3.3%포인트(24.2%→27.5%, 지방세 포함) 올라감에 따라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준)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법인세율이 1%포인트(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가 3.72%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를 적용해 법인세율 3.3%p 인상에 따른 한국의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6000억원 감소해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본이 10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내 총투자 감소(20조9000억원)의 49%가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간 결과”라며 “최근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제철, 고로개수 TF 신설 등 조직개편

현대제철이 고로 개수를 준비하고 미래 관련 제품 등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직을 정비했다.

현대제철은 1일 고로 개수 태스크포스(TF) 가동과 연구개발본부내 선행개발실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고로 개수 TF는

앞으로 본격화될 고로 개수에 앞서 준비를 하려고 만들었다.

현대제철 1고로는 2010년 1월에 가동을 시작해서 내구연한이 돼 간다. 고로는 10~15년이 지나면 열 때문에 얇아진 내화벽돌을 해체하고 다시 쌓는 개수를 해야 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블리더(가스를

배출하는 폭발 방지 안전밸브)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강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연구개발본부내 자동차강재센터와 공정기술센터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 선행개발실을 만들었다. 연구개발과 생산 부문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기술품질본부의 생산기술실을 생산기술센터로 확대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시스템기술실을 만들었다. /정연우 기자 yw964@